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심화방안 연구

安仁海*

<목 차>

1. 서론
2. 북한핵문제와 중국의 역할
 - (1) 북한세습체제와 핵문제
 - (2) 6자회담과 중국의 역할
3. 한·중간 상호 신뢰 증진
 - (1)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본문+부속서) 채택
 -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
4. 한반도 통일외교와 동북아 평화
 - (1) 통일외교의 관점
 - (2) 통일외교와 평화
5.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1. 서론

중국은 21세기 중심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부문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근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경제 위기를 겪으며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을 G2로 명명하며 기후변화, 테러, 대량살상무기비확산 등 지구적 관심사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며 중국의 부상에 주목

* 高麗大學校 國際大學院 教授.

하고 있다.¹⁾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G20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세계 속에 그 위상을 높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남북한간의 경색국면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겪으며 남한의 원칙을 내세운 대북한 강경정책으로 이어져 왔다.²⁾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부분적으로 보였지만 북한은 '상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2011년 1월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이후 양국은 남북한간의 '건설적 대화'를 촉구해 왔다. 한국정부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에 대한 사과를 대화재개의 우선조건으로 제시해 왔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³⁾ 6자회담 당사국들간에 조심스럽게 대화재개를 위한 진의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되어 왔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 성공으로 민주당 정부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후진타오의 퇴진으로 시진핑 주석이 부상하고 지도부 교체가 이뤄졌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 제국 건설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일본은 아베총리의 당선과 참의원선거 압승으로 극우적인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David Kang, "The U.S. Pivot to the Pacific and China's Respon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 2012), 63-88; Jeffrey A. Bader,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2); Henry Kissinger,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Robert G. Sutter, *U.S.-Chinese Relations: Perilous Past, Pragmatic Present* (London: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2010); Warren I. Cohen, *America's Response to China: A History of Sino-American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Chiquan Zhu,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2) 서울신문, 2013년 7월 18일.

3) 연합뉴스, 2013년 6월 9일.

북한은 지난 해 김일성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공표하였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의 성공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에서의 신질서 태동이 예상되는 시기에 한·중간 상호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핵문제와 중국의 역할을 점검하고 상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향후 통일 외교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위한 제언을 곁들여 보고자 한다.

2. 북한핵문제와 중국의 역할

(1) 북한세습체제와 핵문제

북한 노동당대표자대회가 2010년 9월, 44년 만에 열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가 정착되고 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에 어떤 정권에 들어서든지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언급했지만⁵⁾ 북한에서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왕조에 가까운 세습이 감행된 마당에 정권생존이 달린 핵보유의를 포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4) 안인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행동방안에 관한 제언,” (사)한중교류협회, 중국인민외교학회 공동주최 중국 베이징 다오위다이(釣魚臺)에서의 제13차한중 지도자포럼 발표. 2013년 8월 20일.

5)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by Hillary Rodham Clinton on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ptember 8,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0/09/146917.htm>>

것이다.

북한의 당면목표의 핵심은 두 가지로 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 확립과 극심한 경제위기 극복이다. 1978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이념투쟁을 넘어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을 주창함으로써 중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덩샤오핑은 마오의 사후 그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토대위에서 이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습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유훈정치”로부터 김정일-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우상화정책에 따라 선대의 노선과 정책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⁶⁾ 이는 곧 정치기반의 정당화와 직결되므로 주민들을 외부정보로부터 격리시키는 ‘폐쇄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북한은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극심한 경제난국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으로 외부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이 필수적이다.⁷⁾ 외국자본의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방적이며 투명한 정책결정으로 대외 신뢰를 얻어야 한다.

세습체제를 위한 ‘폐쇄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개방’이야말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이다. 하나의 돌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하는 것이다. 결코 쉽게 달성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

북한지도부에게 핵무기 개발은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잇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외세의 직접적인 공격을 막아 북한세습정권을 지켜내고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협력을 이루고자 한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생존수단으로 핵안보에 의지하고자 했다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핵포기는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소위 “핵·경제 병진정책”을 내세우며 핵무기는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길 것이다. 핵포기야말로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것

6) Samuel S. Kim,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the Interfac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Vol. 34, No.1, 2010, pp.49-85.

7) Piao Yingai,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f DPRK's Market Economy for the Perspective of China," (II, 2012), pp.113-130.

으로 북한은 믿고 있을 것이다.

(2) 6자회담과 중국의 역할

올해 중국은 북한을 포함하는 6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면서 반관 반민 1.5트랙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⁸⁾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온적이던 중국이 이를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05년 교착상태의 6자회담을 정상화시키면서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중국측 대표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중국은 6자회담을 제도화함으로써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시진핑-오바마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형대국관계론'을 내세운 외교 구상을 실현시키고자 한다.⁹⁾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6자회담 조기재개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여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원한다. 북한 3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했다는 일부의 관측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관측된다.

북한에서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위시해서 6자회담 수석대표 이용호 부상 등 북핵 협상라인의 실세들이 참석했다. 중국측과 일치된 견해를 피력하면서 김계관 부상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북한의 정책목표는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와 9·19공동성명 이행을 요구했다. 상호 존중과 평등,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반면 한·미·일 3국은 6자 혹은 양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가시적인

8) 중앙일보, 2013년 9월 23일.

9) 문화일보, 2013년 6월 14일.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¹⁰⁾ 미국은 '2·29+α'를 필요조건으로 내세운다. 2012년 2·29합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영변 핵 활동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한다는 약속이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α', 즉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배의 송환 이라든가 흑연감속로 가동 중단 등을 암시함으로써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¹¹⁾

지난 1994년 제1차 북한핵 위기 시에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협정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지만 2002년 북한에서 고농축핵우라늄(HEU)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 4강대국의 보장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6자회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6자회담을 통한 북한핵포기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이라크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의지에서 현실적인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이라크의 사담후세인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은 정작 핵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부가 공격을 당하고 실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일찍이 핵무장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돌릴 수도 있다.¹²⁾

반면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이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으나 2001년 9.11사건이후 반테러캠페인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급기야 인도와 더불어 파키스탄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서 대화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고, 또한 북한이 핵의지를 버리지 않더라도 북한을 제재할 뚜렷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의 초기 구도는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1:5(북한 대 5개국)의 입장이었다.

10) 연합뉴스, 2013년 9월 21일.

11) *New York Times*, August 30, 2013.

12) 로동신문, 2013년 4월 18일.

그렇지만 한국정부가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사태의 사죄를 앞세워 원칙을 지키고자하는 반면, 북한을 포함하는 다른 국가는 그러한 조건보다 우선 남북 회담-북미회담-6자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¹³⁾ 물론 미국의 경우 한국정부를 배제하거나 남북한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경색일로로 치달았고 6자회담은 열리지 않아 중국의 주도적 역할도 빛을 바래게 되었다.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6자회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도 했다.

3. 한·중간 상호 신뢰 증진

한·중 양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5월 방중 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임을 선포한 이후, 그 해 8월 후진타오주석의 방한 시 구체적 추진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¹⁴⁾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양국 정부, 의회, 국방 등 각 분야에서의 고위급 인사간 빈번한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정치적 신뢰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일환으로 양자관계와 더불어 세계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¹⁵⁾

13) Shi Yin hong, "China and the Two Koreas: Dilemmas in the North Entanglement and Uneasy Relations with the South,"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I, 2012)

14) 1992년 수교시 우호협력관계,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김대중 대통령 방중),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노무현 대통령 방중),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명박 대통령 방중)

15) Taeho Kim, "China's Changing Coercive Diplomacy: Strategic Implications for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 2012), pp.207-230.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은 올해 새로운 정부출범에 맞추어 국민형식의 방중을 통한 한·중정상회담(2013.6.27)을 개최하여 신정부간의 견실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은 방중 슬로건으로 “心信之旅(마음과 믿음을 쌓는 여정, a journey of connecting hearts and building trust)를 표방하여 중국인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었다.¹⁶⁾ 이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본문+부속서) 채택

1) 정치·안보분야

한·중은 포괄적·다층적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기존채널을 강화함으로써 정상간의 다양한 소통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장관 간의 상호방문을 정례화하고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다(외교차관 간의 전략대화는 연 2회 개최).

신규채널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담당 국무위원 대화, 외교안보대화, 정당간 정책대화, 국책연구기관 합동 전략대화(정치·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일환으로 양자관계와 더불어 세계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2) 경제·통상분야

양국간 교역액은 1992년 수교시 63.8억불에서 2012년 2,151.1억불로 34

16) 연합뉴스, 2013년 6월 30일.

배 늘어났다(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제3 교역대상국). 한·중 교역규모는 한·미와 한·일을 합한 수치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교역량: 한·중(2,151.1억불), 한·일(1,032억불), 한·미(1,019억불)이며 대중국 투자액은 2012년 누계로 566.9억불로 미국 다음으로 2위).

2012년 5월에 개시된 한·중FTA를 높은 개방수준의 체결을 목표로 협상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아직 구체적인 수ちに 대해서는 양국이 협의할 예정이다.¹⁷⁾ 농업분야 등 갈등요인이 있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만큼 win-win할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기술·에너지·금융·통관 등 분야에 걸쳐서 7건의 MOU를 체결하였다.¹⁸⁾ 한·일간에 무효화되어 버린 통화스왑에 대해 한·중간에는 협정 만기(2014년 10월)를 연장(2017년 10월)하기로 하였다. 현재 3,600억 위안(한화 약 64조원) 규모인 한·중 통화스왑의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문화인적교류 분야

한국과 중국은 유교권으로 폭넓은 정서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교류가 이뤄져 왔다. 한·중간 인적교류는 1992년 13만명에서 2012년 689만명(방중 406만명, 방한 283만명)으로 53배 가량 증가함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의 “한류(韓流)”와 한국에서의 “漢風”으로 상호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뤄지고 있다.¹⁹⁾

17) 연합뉴스, 2013년 7월 2일. Young-June Park, “China-Japan Strategic Competition and South Korea’s Security Choices: Focusing on the Issue of Maritime Security,” (I, 2012), pp.129-153; “FTA Competition and Beyond-The Implication of CJK FTA for East Asia and Asia-Pacific,” (II, 2012), pp. 173-188; Pyeong Seob Yang, “Main Issues and Prospects for Korea-China FTA,” (II, 2012).

18) (1)응용기술 연구개발 MOU(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신흥산업분야 공동연구), (2)해양과학기술 협력 MOU, (3)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 MOU, (4)에너지 절약분야 MOU, (5)따오기(수컷 두 마리) 도입 MOU, (6)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MOU(상호 수출입 안전 우수관리업체 대상 통관 간소화), (7)수출입은행간 상호리스크 참여 약정(제3국 진출시 공동파이낸싱) 등이다.

현재 중국교민은 약 65만명으로 한국유학생이 6만 2천여명(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학생 약 6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 세계 최초의 ‘孔子學院’이 세워진 이래 19개소(2013년 5월 기준)가 설립되었으며 한국에서 중국 문화와 중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가 높아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국민간의 다양한 문화형태의 교류, 특히 인문유대 강화에 합의하여 양국 국민간의 우호정서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에서 인문분야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교육과 예술분야에 이르는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유해를 가족의 품에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고, 중국은 우의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한국내 중국군 유해는 367기가 발굴되었으며, 동 유해들은 북한군 유해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적군 묘지’에 안장되어 관리되고 있다.²⁰⁾ 1997년까지 유엔사-북측 군사정전위 대표 채널로 중국군 유해 43기가 중국측에 송환된 바 있다. 이후 북한측의 군정위대표단 철수 이후 중국군의 유해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안보·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적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양국간 상호 신뢰감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19) 2012년 기준 한·중 간 항공 운항편수는 48개 노선, 주 750여회에 이른다(2013년 8월 현재 주 843편으로 알려짐,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의 언급).

20) 연합뉴스, 2013년 6월 30일.

서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첫째, 한·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핵 불용의 기본 입장을 공유하면서 공동성명에 비핵화를 명시하였다. 북한핵무기 개발에 따른 위협에 대처한다는 공동인식 하에 향후 비핵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강화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촉구하였다. 다만 중국이 안보리제재의 이행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중국의 의지의 강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한 중국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국의 대북정책(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을 지지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프로세스)을 통해서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공감하였다. 공동성명에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명시함으로써 양국은 북한이 변화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통일외교와 동북아 평화

(1) 통일외교의 관점

2011년 1월 중·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목표·남북대화 필수’에 합의했다.²¹⁾ 이어서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 열렸지만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으며, 8월 15일을 계기로 남북한관계변화를 예측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중·미정상간의 상호인식과 남북한대화는 구조적 역학관계를 이어 왔다.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은 데탕트 정책으로 마오쩌둥 주석의 마음을 열고 성공적인 중국방문이 이뤄졌다. 중국도 적(소련)의 적(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전략에 따라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다. 한반도에서 같은 해 7월 냉전이후 최초의 남북대화가 이뤄져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악의 제국’ 소련과의 스타워즈(Star Wars)로 군비경쟁을 불사하였다.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에 대항하지 못하고 경제난에 허덕이던 소련은 1991년 붕괴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해 말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고, 1992년 남북비핵화 선언이 있었다.

2000년 임기 말을 맞은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장쩌민 주석과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로서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포용을 주장한 햇볕정책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미국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과 북한 조명록특사의 방미가 이뤄졌다.

취임 초 부시대통령은 미·일동맹을 우선시하면서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불렀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적대시켰으며, 9·11 사건 이후 반테러리스트 캠페인 동참여부로 ‘적과 친구’(foe or friend)를 구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계승했지만 북·미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남북한관계도 진전될 수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한 이후 임기 말에 이르러서야 중국을 이해상관자(interest stakeholder)로 받아들이고 북한과의 관계진전도 모

21) Tae-Hwan Lee, "The Direction and Problems of South Korea's New Diplomacy in the Era of US-China," (I, 2012)

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노대통령은 김위원장과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10·4 선언에 합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중·미간의 호혜적 관계는 남북한 간에도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마트파워를 내세워 중국과 북한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공화당을 비롯하여 상대방과의 타협과 협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2011년 초 중·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우려하고 남북한의 건설적 만남을 촉구한 만큼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사적으로 중·미관계가 호혜적일 때 남북한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²²⁾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외교의 기반은 동북아 주변국과의 구조적 역학관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짜여 져야 한다. 천안함·연평도사태를 겪으며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중국을 활용하는 전략을 펴왔다. 중국의 북한 편들기라는 관점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강화 일변도가 과연 한국의, 또한 한반도의 이해관계에 최선인지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2) 통일외교와 평화²³⁾

그동안 남북한관계가 장기간 경색됨에 따라 한국정부의 통일외교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변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북한 편들기’라든가 ‘한·미동맹강화’로 자칫 냉전시대의 양극 대결구도로 돌아간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항구적인 평화는 요원해질 것이다. 한반도에서 주변국, 특히 중국에 적대적인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북한경제의

22) 동아일보, 2012년 8월 24일.

23) 안인해, “한·중 상호신뢰증진 방안,” (사)21c韓中交流協會·中國人民外交學會 주최, 제11차 한중지도자포럼에서 발표, 중국, 베이징, 2011년 8월 30일.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다면 향후 통일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서 성공한 사회주의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양측의 체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성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양국 사회주의체제의 목표가 다르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유훈에 따라 '경제건설'을 목표로 현대화를 지속해 왔다. 매년 10%를 넘나드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개혁·개방을 수단으로 막대한 외자유치를 통해서 세계 제조업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세계 경제, 금융위기 속에서도 3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북한의 당면 목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없는 세습체제 달성이다. 김일성 유훈정치를 통한 체제결속을 꾀하고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통치자금에 필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금강산 관광, 또한 개성 공단에서의 노동자 임금이든 현금이 유용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세습체제성공을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북한은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난에 봉착해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북한의 대비되는 상황에 따라 경제적 성과는 이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은 점-선-면으로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4개의 경제 특구와 14개의 해안도시로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으로 해안선을 따라 해안지방에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은 뚜렷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중심으로 축적된 막대한 자본을 내륙과 서부대개발에 쏟고 있다. 중국 동부에서 서부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도 중국방문으로 개혁·개방의 경제개발 효과를 모를 까닭이 없다. 다만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등 일부 시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제

24) Byung-Kwang Park,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South Korea-China Cooperation in Managing North Korea Opening/Reform and Contingencies," (II, 2012), pp. 91-110.

관리개선조치' 효과가 북한 전체로 파급된다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세상의 변화에 눈뜨고 이상화의 모순을 알게 된다면,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은 순조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대북한정책에서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 이후 남북한관계는 거의 단절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체제안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다름을 알지만, 또한 북한을 인정하고 공존하며 협력하고 있다.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 통일보다는 역내 안정과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간 오해와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절실하다. 북한내부문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전략적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문제 해결에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미간의 호혜적 분위기는 남북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미관계 변화에 따라 한반도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통일외교는 일방적으로 북한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변국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과 결과가 중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동북아 공동체형성을 위한 공동연구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기구 설립 등으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²⁵⁾ 한·중간에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통해 양국이 공

25) Sukhee Han,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Korea-China-Japan and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From Korea Perspective," (II, 2012), pp.147-170; Alexander Zhebin,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Strengthening Russia-China-North Korea Security Cooperation," I, 2012), pp.91-120; Fukunari Kimura, "Perspective from Japan: Economic, Political, Cultural, Environment, Nuclear Security, etc.," II, 2012), pp.173-188; Heungkyu Kim, "South Korea's China Policy: Evaluation and

동 번영과 동반 상승으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5.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온 양국은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정부와 시진핑주석 간에 이뤄진 정상회담을 통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역내문제 관련 전략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 상호간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통일외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고려를 감안하여 역내 세력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통일 후 주한미군의 역할을 포함하여 폭넓고도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가 결코 중국과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공생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둘째, 한·중·일 협력관계가 중요한 시점에 중국과 일본은 다오위다오를 놓고 민족주의적 영토분쟁을 겪으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일간의 격렬한 분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일간에도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감정적 대립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극우경화를 강화시키

는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된다면 과연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대북한정책에 대해 한국이 요구하는 관점에 귀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도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행태에 대해 중국이 기계적 형평성보다는 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양식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UN 까지 역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섰다던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에 걸맞는 행동 양식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명성과 상호주의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Alexander Zhebin,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Strengthening Russia-China-North Korea Security Cooperation: From Korea Perspectiv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I*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12), pp.91-120.
- Byung-Kwang Park,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South Korea-China Cooperation in Managing North Korea Opening/Reform and Contingencie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II*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12), pp. 91-110.
- Chiqun Zhu,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 Fukunari Kimura, "Perspective from Japan: Economic, Political, Cultural, Environment, Nuclear Security, etc: From Korea Perspective," (II, 2012), pp.173-188.

- Henry Kissinger,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 Heungkyu Kim, "South Korea's China Policy: Evaluation and Suggestions: From Korea Perspective," (II, 2012), pp. 1-14.
-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2)
- Jeffrey A. Bader,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2)
- Piao Yingai,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f DPRK's Market Economy for the Perspective of China," (II, 2012), pp.113-130.
- Pyeong Seob Yang, "Main Issues and Prospects for Korea-China FTA," (II, 2012).
- Robert G. Sutter, *U.S.-Chinese Relations: Perilous Past, Pragmatic Present* (London: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2010)
- Samuel S. Kim,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the Interfac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Vol. 34, No.1, 2010, pp.49-85.
- Shi Yinhong, "China and the Two Koreas: Dilemmas in the North Entanglement and Uneasy Relations with the South,"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I, 2012)
- Sukhee Han,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Korea-China-Japan and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From Korea Perspective," (II, 2012), pp.147-170.
- Taeho Kim, "China's Changing Coercive Diplomacy: Strategic Implications for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 2012), pp.207-230.
- Tae-Hwan Lee, "The Direction and Problems of South Korea's New Diplomacy in the Era of US-China," (I, 2012).
-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by Hillary Rodham Clinton on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ptember 8,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0/09/146917.htm>>
- Warren I. Cohen, *America's Response to China: A History of Sino-American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Young-June Park, "China-Japan Strategic Competition and South Korea's Security Choices: Focusing on the Issue of Maritime Security," (I, 2012), pp.129-153: "FTA Competition and Beyond-The Implication of CJK FTA for East Asia and Asia-Pacific," (II, 2012), pp. 173-188.

안인혜, “한·중 상호신뢰증진 방안,” (사)21c韓中交流協會·中國人民外交學會 주최, 제 11차 한중지도자포럼에서 발표, 중국, 베이징, 2011년 8월 30일.

안인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행동방안에 관한 제언,” (사)한중교류협회, 중국인민외교학회 공동주최 중국 베이징 다폰위다이(釣魚臺)에서의 제 13차한중지도자포럼 발표. 2013년 8월 20일.

The New York Times

- 《국민일보》
- 《노동신문》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문화일보》
- 《서울신문》
- 《연합뉴스》
- 《인민일보》
- 《중앙일보》

< Abstract >

The year 2013 has become a critical point in history at which the progression of the Northeast Asian dynamics could be adequately assessed. With the reelection of President Barack Obama in the U.S., the Democrats have come to endure. In China, Xi Jinping government has fully replaced Hu Jintao's. In Russia, Vladimir Putin is fostering his dream of constructing a powerful Russian empire. In Japan, the election of Shinzo Abe and a landslide victory of his party in the elections to the upper house have driven the nation to the far right. In South Korea, the new Park Geun-hye government has proclaimed and emphasized the fundamental national principle grounded upon trust. In North Korea, in remembrance of the 100th anniversary of Kim

Il-sung's birth, the year 2012 was proclaimed to be the "year of the achievement of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with such desired goal yet to be fulfilled, the success or failure prospects of the hereditary system that has led to Kim Jung-eun's new leadership is receiving much attention globally.

Under such dynamics that would foment the rise of new order in Northeast Asia, solidification of mutual trus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 would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Taking this perspective, the article discusses issues of mutual interests to both South Korea and China and analyzes ways in which strategic trust between the two nations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ose common grounds. The article engages in the analysis of the prospects of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conveying hopes that the nation overcomes the divided nature of the peninsula to achieve pea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Key words: Korea-China Relation, trust proces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unification diplomac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9. 30.	2013. 11. 11.	2013. 11. 25.	2013. 11. 26.	2013. 11. 30.